드론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 의결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서성부)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어 18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창현)는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1, 2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안명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박창현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근우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의 참여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현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김근우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근우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박미순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미순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대 남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남구의회(의장 서성부)는 지난 7월 16일, 제9대 개원 3주년을 맞아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한 활동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간 정례회 7회, 임시회 24회를 열고 조례 112건을 포함해 36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의회교실과 유치원생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의정을 구현했다. 서성부 의장은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민과 가까운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 : //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4차 산업을 현실로

박창현 의원 (대연1·3동)

현재 드론은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뛰어넘어 가기 힘든 현장의 눈과 손이 되기도 하며, 전쟁터에서는 전투 수단과 의약품·생필품 배송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되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러한 흐름에 일정 부분 대응하고 있습니다. 드론체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4종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고, 구청장님과 실무 공무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산불 감시, 영상 촬영 등 행정 현장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위기감과 다급함을 느낍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천시는 1종 드론 자격증 응시료 일부 지원하고, 서울시와 대전시는 드론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치안·재난·방역·물류·관광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구는 아직 드론 관련 산업 기반 자체는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도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큰 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 역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인생후반전센터를 활용한 드론 운용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 남구 드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동 심폐소생기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박경숙 의원 (비례대표)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3,58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정, 체육시설, 학교, 거리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골든타임 4분 내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생존에 결정적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도 공공시설 120여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어 있으나, AED는 흔자 환자를 살펴야 하는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수기 가슴압박은 정확성과 체력적 부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비가 '수동식 심폐소생기'입니다. 전력 없이도 분당 100~120회, 5㎝ 깊이의 정확한 흉부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음성 안내가 있어 누구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또한 AED 대비 50% 이상 저렴합니다.

수동식 심폐소생기의 기대효과로는 혈류 유지를 통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 구조자의 체력 부담 완화 및 CPR 품질 향상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응급 대응 체계 수준 향상입니다. AED와 함께 병행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책임성이 커지게 됩니다.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수동식 심폐소생기를 주요 거점에 도입하고, 교육과 안내가 병행된다면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해지고 실질적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남구가 한발 앞서 이러한 생명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부산시민, 지금 25만원이 절실하다!

허미향 의원 (용당,감만1·2,우암동)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란으로 인한 경제 불황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은 SNS를 통해 "부산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결을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시민이 이 정책을 원치 않는 것처럼 말한 것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영 국회의원은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산업은행이다"는 글을 올리며 화제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한 사안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꺼내며 민생정책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자, 시민의 삶보다 정쟁을 우선시한 태도입니다.

또한 박수영 국회의원은 하루 전, 후원금 모금에 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후원금을 요청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민의 25만 원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몇십억 자산가에게는 25만 원이 큰돈이 아니므로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전기세, 학원비, 월세를 감당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뜻인 양 포장해 받느니 마느니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목소리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남구 미래 위한 HMM·산업은행 유치

김철현 의원 (용당,감만1·2,우암동)

저는 남구의 미래를 위해 HMM 본사와 산업은행의 부산 남구 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HMM은 연 매출 11조 원, 자산 총액 33조 원을 넘는 글로벌 물류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바뀔 수 있으며, 최적지는 남구 우암동입니다. 우암동은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 부지로 해양R&D센터, 연계시설, 물류 기반이 갖춰져 있어 HMM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인근 부경대, 동명대는 산학협력과 인재 양성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운 기업 이전을 위해 우암동을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입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구가 해양산업의 허브가 될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은행의 문현금융금단지 이전입니다. 문현금융단지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산업은행이 합류하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벤처투자가 연결되는 금융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문현금융단지는 부산 금융 발전의 최적지입니다. 이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남구지역위원장이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부산 사람 맞습니까?'라는 현수막으로 왜곡된 인식을 주려 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당리당략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지역의 실익과 미래입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남구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HMM 본사와 산업은행의 부산 남구 이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UN남구' 구 명칭 변경 추진 무산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본 의원은 지난 5월 7일, 구청의 무리한 '구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구청이 추진한 'UN남구' 명칭 변경 사업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됐고, 8천만 원의 용역 예산은 불용 처리될 것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중앙 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본 사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남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협의 필요성을 전달받았지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6월에는 외교부로부터 'UN' 명칭의 사용이 전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체부는 'UN' 명칭이 국어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동' 외국어 명칭 불승인 사례가 있었음에도 남구청은 사업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는 남구청의 책임성 부족과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UN남구' 명칭 변경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는 재정난 속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구청의 오판과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와 소통 없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전 검토는 물론, 구민과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절차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구청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삶에 혼란과 부담을 주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편 가르기 정치, 이제 그만

이종현 의원 (문현1·2·3·4동)

저는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남구의 중요 현안들이 민생지원금 논란으로 인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이 산업은행 유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기관은 고유의 역할과 시너지로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소재한 남구의 백년대계입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1,200여 명이 모여 이전에 대한 염원을 외쳤으며,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민의에 따라 산업은행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청원 결과를 가지고 정무위원장과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책무입니다.

민생지원금 또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회성 현금 지급에 가려져 산업은행 이전이 배제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단순히 '반대'라고 왜곡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산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남구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거 산업은행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했던 박재범 전 구청장, 그 '부산 남구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해수부가 오면, 산업은행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에게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람, 남구 사람들은 산업은행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더 나은 남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학가 자율상권 이륜차 주차장·쉼터 설치를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발언에 앞서 최근 부산 시민들이 크게 실망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이전' 공약을 취임 후 며칠 만에 시행하고, 최근 임시청사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해수부 이전 축하' 현수막을 부산 전역에 걸었지만,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뒤늦게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색만을 얘기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균형발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륜차 전용 주차장과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남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 성장과 함께 이륜차 이용도 증가했지만, 도시는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륜차들은 보도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경성대 일대는 배달 밀집 지역임에도 주차 공간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배달 노동자들은 잠시라도 앉아 쉴 벤치 하나 없이 일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성대·부경대 자율상권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디자인과 조경, CCTV 등 안전 요소를 포함한 복합 쉼터형 주차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민간 협업모델로 사회문제와 더불어 수익도 창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차공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닌,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배달 노동자 권익 보호, 도시 질서와 품격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남구가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선도하길 기대합니다.

풍피두 분관의 이기대 유치, 더욱 신중을

박찬 의원 (용호1·2·3·4동)

지난 15일 남구청에서 열린 '풍피두 부산 분관의 이기대 공원 유치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고성이 오가며 어수선했습니다. 찬성 측은 세계적 시설 유치로 이기대공원을 한 단계 높은 명소로 만들고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수준 향상 등을 주장했고, 반대 측은 불투명한 행정절차, 막대한 예산, 공론화 부족,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표명했습니다.

정책에는 늘 찬반이 나뉠 수 있으므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부산시의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피두 측에 시설과 부지 점유권을 인정하면서 운영비까지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불평등합니다. 박형준 시장의 영구적 운영 가능성 언급과 달리 양해각서에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돼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서울 분관과 달리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감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미 남구는 더뷰와 스노우캐슬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경관만 해친 선례가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시설이라도 유치의 확정은 그간 개발행위 자제 흐름과의 차이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며 이후 무분별한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감정만 남은 설명회 대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대상지가 남구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에게 성실히 알리고 그 목소리가 진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